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 산업정책의 신뢰성은? ”

한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손꼽으라면 국민일반이나 경제전문가 모두 정제 · 산업정책을 지적할 것이다.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경제 · 산업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제 · 산업의 발전동력이 다원화되고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선진국에서도 정책적 판단이 경제와 산업의 판도를 뒤바꾸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의 핵심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후진국 경제에서는 그 영향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말 한마디에 경제의 핵심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Dow지수와 NASDAQ지수가 춤을 추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다.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의 핵심인 금리정책의 중요성도 작용했겠지만 현재의 그린스펀 의장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정책이 오랫동안 신뢰성을 확보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충격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유연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 산업정책은 과연 어떠한가? 2000년 벽두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DJ정부는 물론 과거정권 모두가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허둥거리기 일쑤였고, 그런 나머지 경제를 올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이다.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과 극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정책이다. 정부가 에너지사업 진입을 자유화하고 가격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한지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말 자유화정책을 시행에 옮겼으나 21세기에 들어서도 완전한 자유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까지 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2001년부터 7%의 할당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수입 석유제품 가격을 2%p 상승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에너지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1%를 적용하고, LPG에도 1.5%를 적용함으로써 2가지 석유제품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휘발유를 비롯한 등유, 경유, 중유 등에는 2001년 1월1일부터 기본관세 8%보다 1%p 낮은 7%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인 것이다.

2000년부터 석유제품 수입기업들이 너도나도 석유제품 수입에 뛰어들면서 국내 정유4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석유제품 가격을 자유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홍수를 이루고 있는 수입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동력원으로 산업이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세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에너지 수입은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의 에너지 가격은 자율적 경쟁가격이며 그리고 적정한 것인지, 오늘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적절한 것인지 등등 종합적인 판단과 고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뚜렷한 원칙과 경제논리보다 이해집단의 인기에 영합함은 물론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부정부패와 관련되는 경제정책을 무원칙하게 입안하고 집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통없는 미래는 없다」는 경구가 필수적인 시점에서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된 소액주주 보호, 노동조합의 압력에 굴복한 부실은행 통합 연기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제스처가 경제상황을 지배하고 있고, 권력누수현상을 틈타 관료집단의 부정부패가 다시 기승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경제가위기를극복하고바로서기위해서는경제 · 산업정책의투명성과일관성유지가무엇보다필요한시점이다.

<화학저널 2001/1/1>